

# 법의학부검 의뢰 문서 목록화를 위한 연구: 법의학부검 의뢰 문서에 대한 정량적 분석

박지혜<sup>1</sup> · 나주영<sup>2,3</sup> · 이보영<sup>4</sup>  
송승희<sup>1</sup>

<sup>1</sup>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sup>2</sup>전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sup>3</sup>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sup>4</sup>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 Study for Lists of Forensic Autopsy Request: Quantitative Analysis about Documents Relating to Autopsy Request

Ji Hye Park<sup>1</sup>, Joo-Young Na<sup>2,3</sup>, Bo Young Lee<sup>4</sup>, Song Hee Song<sup>1</sup>

<sup>1</sup>Forensic Medicine Division, National Forensic Service Gwangju Institute, Jangseong,

Korea, <sup>2</sup>Biomedical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Gwangju,

Korea, <sup>3</sup>Emergency Medical Cente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Gwangju, Korea,

<sup>4</sup>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Gwangju, Korea

In the Republic of Korea, relevant documents are submitted to forensic doctors or agencies when courts grant confiscation warrants for autopsy. If the essential data on unusual death are not submitted at the time of the autopsy, it may be difficult to properly understand the situation relating to an unusual death prior to the autopsy, thus reducing the accuracy of the autopsy. As many as 6,133 out of 6,610 autopsy data (92.8%)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15 were analyzed. Most autopsy appraisal requests (99.8%) were submitted. Unusual death occurrence reports (86.0%) and command recommendations of unusual death (70.3%) were submitted in many cases. However, prosecutor commands on unusual death were submitted only in 27.8% cases, and confiscation warrants were not submitted in 7.4% cases. As for postmortem inspection and death scene investigation reports, 29.3% and 34.1% cases were submitted, respectively. In addition to the above two documents, death certificates and records of statement of a relative had significant regional variations (0.3%–80.1%, 3.1%–64.7%, 27.8%–81.3%, and 40.8%–96.8%, respectively). For postmortem inspection and death scene photos, 2.7% and 3.2% were submitted in black-and-white photographs, respectively. The authors propose a list of forensic autopsy requests including autopsy appraisal requests, unusual death occurrence reports, command recommendations of unusual deaths, prosecutor commands on unusual death, and confiscation warrants unconditionally, as an essential document reflecting the progress of investigations. We suggest that postmortem inspection reports and photos, death scene investigation reports and photos, and death certificates should be included as part of postmortem investigation data.

**Key Words:** Autopsy; List, Autopsy request; Quality control, autopsy; Statistical data interpretation; Korea

Received: May 13, 2018

Revised: May 20, 2018

Accepted: May 24, 2018

### Correspondence to

Joo-Young Na

Biomedical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42 Jebong-ro, Dong-gu,  
Gwangju 61469, Korea

Tel: +82-62-220-5716

Fax: +82-62-225-9402

E-mail: pdrdream@gmail.com

## 서 론

법의학은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는 의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감정하여 이를 해결하는 학문으로, 이러한 연구 및 감정 중 부검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부검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변사체에 대한 검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주체는 검사이고 그의 판단에 따라 부검 시행 유무가 결정되며, 부검 시행이 결정되면 이를 위하여 법원에 변사자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게 된다[1].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망증명서(시체검안서 혹은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의뢰서 혹은 부검의뢰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변사자검시보고서 혹은 검안소견서 등의 서류를 법의 의사 혹은 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부검이 이루어진다. 법의 의사들은 사인, 사망의 종류 등의 판단을 하기 위해 부검을 시행하기 전에 검시보고서 혹은 검안소견서, 사망증명서, 변사 현장 당시의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하고, 부검 중 시신에서 증거를 찾으며, 부검 후 각종 검사들을 시행한 후 이와 같은 다양한 증거를 수집, 해석하여 부검 감정을 시행한다. 이러한 부검 과정 중에는 부검 의뢰 시 제출된 서류들에 대한 검토 역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변사 사건에 대한 기초적인 수사 자료가 부검 의뢰 시 제출되지 않으면 부검 전 변사체의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부검 중에 살펴야 할 증거를 놓치게 되거나 부검 직후 필요한 검사를 의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검이 마무리된 후 시신은 대부분 화장 또는 매장되어 부검 이후에는 더 이상 시신에서 증거를 찾을 기회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부검 의뢰 시 제출되는 변사 사건에 대한 기초 수사 자료는 사망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 반드시 부검 전에 제출되어야 하고, 체계적으로 목록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법의부검을 대상으로 부검 의뢰 시 제출되는 서류를 분석하고, 이를 목록화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재료 및 방법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법의부검은 6,610건이었고[2], 이 중에서 제출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던 6,133건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들 자료를 참고하여 법의부검 의뢰 시 제출된 자료를 부검감정의뢰서 혹은 부검의뢰서,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변사사건 지휘건의서,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검사지휘서, 압수수색검증영장,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변사자검시보고서 혹은 검안소견서, 변사자 검시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변사현장조사서 혹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사건 현장사진, 사망증명서(시체검안서 혹은 사망진단서), 관계

자 진술조서, 119기록지, 의료기록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유무를 확인하였다. 지역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서류의 제출 여부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검시보고서 혹은 검안소견서의 경우 작성자에 따라 검시조사관, 법의 의사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검시사진 및 현장사진은 제출된 사진이 칼라사진이었던지 흑백 사진이었던지 구분하여 세분화하였다. 사망증명서의 경우 제출된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시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로 세분화하였다.

## 결 과

본 연구에서 검토한 법의부검 자료는 2015년에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6,610건의 법의부검 중에서 부검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던 6,133건의 법의부검 증례로 하였고, 이는 전체 자료의 약 92.8%에 해당하였다.

총 6,133건의 법의부검 자료를 확인하여 부검 당시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부검감정의뢰서 및 부검의뢰서가 제출된 경우는 6,118건으로 전체의 99.8%를 차지하였고,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지휘건의서,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검사지휘서는 각각 5,274건(86.0%), 4,309건(70.3%), 1,702건(27.8%)에서 제출되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의 경우 5,682건으로 전체의 92.6%이 부검 당시 제출되었다.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변사자검시보고서 및 검안소견서는 1,799건으로 전체의 29.3%가 부검 당시 제출되었고, 이 중 검시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와 법의 의사가 작성한 보고서는 각각 1,484건(82.5%)과 262건(14.6%)을 차지하였고, 두 가지 모두 제출된 경우는 53건(2.9%) 존재하였다(Fig. 1). 변사자 검시사진이 제출된 경우는 5,652건으로 전체의 92.2%에 해당하였고, 이 중 컬러사진은 5,498건(97.3%), 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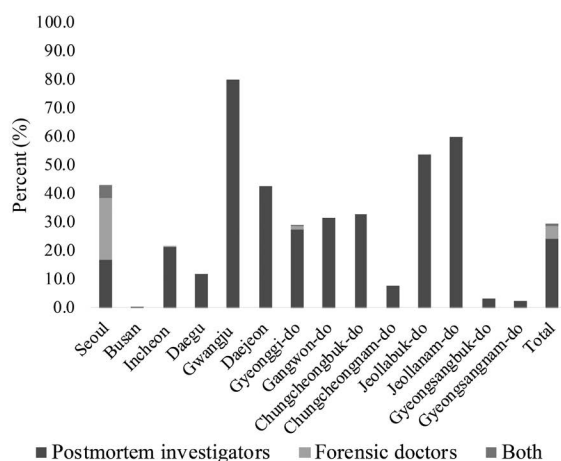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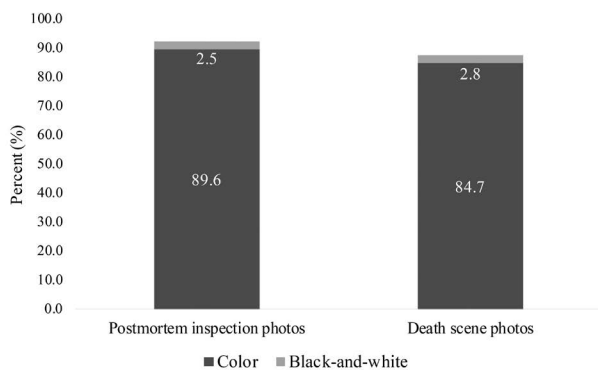
Fig. 1. Classification of postmortem inspection reports by preparing person (%).

백사진은 154건(2.7%)이었다.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변사현장조사서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와 변사현장사진은 각각 2,092건(34.1%)과 5,364건(87.5%)이 부검 당시 제출되었고, 변사현장사진의 경우 컬러사진은 5,193건(96.8%), 흑백 사진은 171건(3.2%)이었다(Fig. 2). 사망증명서(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가 제출된 경우는 4,119건으로 전체의 67.2%에 해당하였고, 이 중 시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는 각각 3,121건(75.8%)과 998건(24.2%)을 차지하였다. 관계자 진술조서가 부검 당시 제출된 경우는 5,294건으로 전체의 86.3%에 해당하였다. 119기록지와 의료기록지는 각각 533건(8.7%)과 1,278건(20.8%)에서 부검 당시 제출되었다.

부검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던 법의부검 증례를 지역별로 확인해 보면 서울 1,106건(18.0%), 경기도 1,656건(27.0%), 인천 417건(6.8%), 강원도 309건(5.0%), 대전 139건(2.3%), 충청북도 251건(4.1%), 충청남도 358건(5.8%), 광주 141건(2.3%), 전라북도 221건(3.6%), 전라남도 360건(5.9%), 대구 184건(3.0%), 경상북도 321건(5.2%), 경상남도 351건(5.7%), 부산 319건(5.2%)이었고, 지역 별 각각의 서류제출 유무는 Table 1과 같았다.

## 고 찰

부검은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부검의 대부분은 법의부검이다.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법의부검은 경찰의 수사 및 검사의 판단 및 법원의 영장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검시 제도에 있어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가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비록 형사소송법상 검시의 주체를 검사로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로 인해 변사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고,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되었다[3]. 이와 같은



**Fig. 2.** Classification of postmortem inspection photos and death scene photos by photo color (%).

대한민국의 검시 제도의 특성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는 3일 장이라는 특수한 장례 의식으로 인해 검시의 시간적 제한이 존재한다. 즉, 부검 후 장례 절차에 따른 변사체에 대한 화장 혹은 매장이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의부검의 신속성 및 일회성이 강요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망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각각의 기관과 전문가 사이에 적절한 의사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부검 의뢰 시 제출되는 서류들 역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였던 법의부검 자료는 2015년도 전체 부검 6,610건 중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던 6,133건으로 전체 부검의 약 92.8%에 해당하였다. 부검감정의뢰서 및 부검의뢰서는 대부분(99.8%) 제출되었고, 변사사건 처리 경과에 따라 작성되는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변사사건 지휘건의서,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검사지휘서, 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은 각각 86.0%, 70.3%, 27.8%, 92.6%가 제출되었다. 즉, 이들 서류는 많은 경우에서 제출되었으나,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검사지휘서의 경우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법의부검의 집행 근거가 되는 법원의 영장의 경우 451건(7.4%)에서 제출되지 않았다. 지역에 따른 편차가 확인되었는데, 변사사건 지휘건의서의 경우 평균 70.3%가 제출되었으나,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경우 각각 47.1%, 58.6%만 제출되었다. 반면에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검사지휘서의 경우 평균 27.8%가 제출되었는데, 대구와 대전의 경우 각각 40.8%와 44.6%가 제출되었다.

변사사건의 수사 자료에 해당되는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변사자검시보고서 및 검안소견서, 검시 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변사현장조사서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현장 사진 및 사망증명서와 관계인 진술조서의 경우 각각 29.3%, 92.2%, 34.1%, 87.5%, 67.2%, 86.3%가 제출되었다. 검시보고서 및 검안소견서의 경우 평균 29.3%가 제출되었는데, 광주의 경우 80.1%가 제출되었으나 부산, 충청남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는 각각 0.3%, 7.5%, 3.1%, 2.6%만 제출되어 지역적인 편차가 심하였다. 변사현장 조사서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는 평균 34.1%가 제출되었는데, 이 서류 역시 지역적 편차가 커서 경상북도에서는 54.2%가 제출되었으나, 부산에서는 3.1%만 제출되었다. 검시와 변사현장 사진은 많은 경우 제출되었는데, 각각의 경우에서 전체 제출된 건 중 흑백 사진이 각각 2.7%, 3.2%로 확인되었다. 검시보고서 혹은 검안소견서의 경우는 전체 제출된 건 중 검시조서판과 법의 의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각각 82.5%와 14.6%로 검시조서판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가 많았다. 법의 의사에 의해 검시보고서가 제출된 곳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이었었는데, 특히 서울 지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청의 협약에 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에 의한 검시보고서가 제출되었다[4]. 사망증명서는 전국 평균 67.2%

Table 1. Available data submitted at the time of autopsy in Korea in 2015

Region	Autopsy appraisal requests	Unusual death occurrence reports	Command recommendations of unusual death	Prosecutor commands on unusual death	Confiscation warrants	Postmortem inspection reports	Postmortem inspection photos	Death scene reports	Death scene photos	Death certificates	Records of statement of relatives	119 rescue reports	Medical records	Cases for which data can be checked
Seoul	1,101 (99.6)	972 (87.9)	721 (65.2)	306 (27.7)	1,085 (98.1)	477 (43.1)	1,069 (96.7)	237 (21.4)	1,035 (93.6)	899 (81.3)	959 (86.7)	94 (8.5)	202 (18.3)	1,106 (18.0)
Busan	316 (99.1)	232 (72.7)	214 (67.1)	72 (22.6)	253 (79.3)	1 (0.3)	212 (66.5)	10 (3.1)	175 (54.9)	103 (32.3)	130 (40.8)	26 (8.2)	67 (21.0)	319 (5.2)
Incheon	416 (99.8)	320 (76.7)	289 (69.3)	112 (26.9)	407 (97.6)	90 (21.6)	398 (95.4)	199 (47.7)	372 (89.2)	311 (74.6)	380 (91.1)	29 (7.0)	100 (24.0)	417 (6.8)
Daegu	183 (99.5)	153 (83.2)	122 (66.3)	75 (40.8)	168 (91.3)	22 (12.0)	161 (87.5)	119 (64.7)	152 (82.6)	136 (73.9)	171 (92.9)	21 (11.4)	46 (25.0)	184 (3.0)
Gwangju	141 (100)	134 (95.0)	102 (72.3)	38 (27.0)	127 (90.1)	113 (80.1)	126 (89.4)	40 (28.4)	116 (82.3)	81 (57.5)	133 (94.3)	10 (7.1)	45 (31.9)	141 (2.3)
Daejeon	139 (100)	132 (95.0)	118 (84.9)	62 (44.6)	121 (87.1)	59 (42.5)	131 (94.2)	37 (26.6)	130 (93.5)	88 (63.3)	131 (94.2)	12 (8.6)	39 (28.1)	139 (2.3)
Gyeonggi-do	1,652 (99.8)	1,443 (87.1)	1,225 (74.0)	444 (26.8)	1,587 (95.8)	477 (28.8)	1,595 (96.3)	749 (45.2)	1,570 (94.8)	1,262 (76.2)	1,551 (93.7)	164 (9.9)	340 (20.5)	1,656 (27.0)
Gangwon-do	309 (100)	280 (90.6)	230 (74.4)	69 (22.3)	292 (94.5)	98 (31.7)	298 (96.4)	142 (46.0)	295 (95.5)	244 (79.0)	298 (96.4)	38 (12.3)	63 (20.4)	309 (5.0)
Chungcheongbuk-do	251 (100)	244 (97.2)	161 (64.1)	61 (24.3)	234 (93.2)	82 (32.7)	246 (98.0)	109 (43.4)	243 (96.8)	146 (58.2)	243 (96.8)	13 (5.2)	45 (17.9)	251 (4.1)
Chungcheongnam-do	358 (100)	322 (89.9)	279 (77.9)	106 (29.6)	327 (91.3)	27 (7.5)	332 (92.7)	108 (30.2)	324 (90.5)	108 (30.2)	336 (93.9)	36 (10.1)	75 (21.0)	358 (5.8)
Jeollabuk-do	221 (100)	190 (86.0)	104 (47.1)	62 (28.1)	184 (83.3)	119 (53.8)	196 (88.7)	26 (11.8)	182 (82.4)	139 (62.9)	197 (89.1)	8 (3.6)	33 (14.9)	221 (3.6)
Jeollanam-do	360 (100)	297 (82.5)	211 (58.6)	82 (22.8)	322 (89.4)	215 (59.7)	325 (90.3)	60 (16.7)	247 (68.6)	100 (27.8)	264 (73.3)	29 (8.1)	79 (21.9)	360 (5.9)
Gyeongsangbuk-do	321 (100)	277 (86.3)	261 (81.3)	114 (35.5)	293 (91.3)	10 (3.1)	287 (89.4)	174 (54.2)	274 (85.4)	205 (63.9)	269 (83.8)	25 (7.8)	66 (20.6)	321 (5.2)
Gyeongsangnam-do	350 (99.7)	278 (79.2)	272 (77.5)	99 (28.2)	282 (80.3)	9 (2.6)	276 (78.6)	82 (23.4)	249 (70.9)	226 (64.4)	232 (66.1)	28 (8.0)	78 (22.2)	351 (5.7)
Total	6,118 (99.8)	5,274 (86.0)	4,309 (70.3)	1,702 (27.8)	5,682 (92.6)	1,799 (29.3)	5,652 (92.2)	2,092 (34.1)	5,364 (87.5)	4,119 (67.2)	5,294 (86.3)	533 (8.7)	1,278 (20.8)	6,133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Chungnam includes Sejong. Data for Ulsan and Jeju were not collected.

에서 제출되었으나, 지역적 편차가 커서 서울의 경우 81.3%에서 제출되었고, 부산, 충청남도, 전라남도의 경우는 각각 32.3%, 30.2%, 27.8%에 불과하였다. 한편, 사망증명서 중에서 시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는 각각 75.8%, 24.2%이었는데, 이는 과거의 보고와 비슷하였다[5]. 의료 관련 기록에 해당하는 119 구급일지와 의료기록지는 각각 8.7%, 20.8%에서 제출되었고, 의료기록지는 많은 경우(72.0%)에서 50장 이내이었으나, 전체 제출된 건 중 약 13.4%에서는 100장 이상, 평균 225.6장에 달하는 많은 양의 의료기록지가 법의학부검 감정 시 제출되었다.

위 분석에 근거하여 저자들은 부검 의뢰 시 제출되는 서류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리를 할 수 있었다. 첫째, 부검 의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일정하지 않았다. 둘째, 변사사건 처리 경과에 따른 서류 중에서는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검사지휘서가 가장 적게 제출되었고, 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과 같이 필수적인 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셋째, 변사사건의 수사 자료에 해당되는 서류 중에서는 검시보고서 혹은 검안소견서와 변사현장조사서 혹은 현장감식결과보고서가 적게 제출되었고, 검시 사진과 변사현장 사진 중 흑백 사진이 제출된 경우가 일부 확인되었다. 넷째, 지역에 따라 제출되는 서류들에 있어 큰 편차를 보였다. 이에 저자들은 부검 의뢰 시 제출되는 서류의 목록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변사사건 처리 경과에 따른 필수적인 서류로서는 부검감정의뢰서 혹은 부검의뢰서,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변사사건 지휘건의서,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검사지휘서, 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변사사건의 수사 자료에 있어서는 검시보고서 혹은 검안소견서와 검시사진, 변사현장조사서 혹은 현장감식결과보고서와 변사현장사진, 사망증명서와 관계인 진술조서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19 구급일지와 응급실 의료기록지 등의 의료기록지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변사자에 대한 의료기록은 해부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대사질환 및 감염질환에 대한 변사사건의 감정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2차 감염 등 부검에 참여하는 감정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변사사건 별로 세부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둘째,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지 못하였다. 변사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는 분류에 대한 동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러한 연구가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의 사례에 대한 비교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변사사건의 검시에 있어서는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 대한민국과 비교가 적당한 외국의 사례를 찾기 어려웠고, 본 연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에서 국내 특성에 맞는 연구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NFS2018MED04), Ministry of Interior, Republic of Korea.

## References

1. Kang DY, Kang HY, Kwak JS, et al. A textbook of legal medicine. Seoul: Jungmungak; 1995. p. 14.
2. Park JH, Na JY, Lee BW, et al. A statistical analysis on forensic autopsies performed in Korea in 2015. Korean J Leg Med 2016;40:104-18.
3. Korean Postmortem Investigation Report [Internet]. Seoul: The Segye Times; 2014 [cited 2018 May 1]. Available from: <http://www.segye.com/newsView/20140917004349>.
4. Won YJ, Park JW, Choi SG, et al. The statistical analysis on the postmortem inspection cases of national forensic service Seoul Institute in 2016. Korean J Leg Med 2017;41:67-72.
5. Kim HG, Park JW, Cho WY, et al. The discrepancy of the cause and manner of death between death certificates and autopsy reports. Korean J Leg Med 2014;38:139-44.